

보도시점 2023. 10. 17.(화) 14:00 (2023. 10. 18.(수) 조간)

외국인력을 지역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생활·주거 지원에 협력한다

-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7일(화),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에 따라 지역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정례화(반기별)하기로 결정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 ▲ '23년 E-9 도입규모 1만명 확대(기존 11만명),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 2배 수준 확대,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및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신규 고용 허용 등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중앙-지방 협의회(국제협력관 주재, 7.6.)를 통해 지역 인력 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의회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I. 지역 외국인력 수요조사 분석·활용

지난 8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가이드라인*」을 각 광역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파악한 외국인력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 ▲지역 내 업황 및 업종별 노동시장 현황 분석, ▲지역 자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
인력 수요 도출, ▲지역 고용 거버넌스 등 현장 의견 수렴 → 인력수요의 현장성 검증 등

지자체별로는 주력 산업 및 인력난 심화 업종 중심으로 ▲자체 실태조사, ▲행정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 활용, ▲지역 거버넌스(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했다.

지역별(13개 광역) 외국인력 수요(사례)

- [경기] 기초지자체별(평택·안산·화성 등)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인력부족 실태
- [경남] 지역 내 중소기업인 등을 통해 “조선업” 외국인력 수요
- [울산] 지역 내 “4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화학, 비철금속) 대상 구인애로 실태
- [인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공항 지상조업”의 인력수요
-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20.)에 따른 신규 필요인력
- [제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축산·어업” 현장 필요인력 등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11월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例: 지역인자위 정례 논의) 등을 건의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요구를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체류지원 강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이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에 약 300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 한국어 교육 및 생활·문화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지자체 내 지원 인프라: 외국인 지원시설(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6개소, 가족센터 244개소 등 [지자체 누리집 등 공개자료 기준]

이러한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생활·문화 활동 등 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용허가제(E-9, H-2) 운영 및 근로활동에 관한 상담·교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훈련, 생활 지원 등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 ①상담업무: (기존) 고충상담(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과 행정기능(지방고용노동관서) 분리 → (개편) 지방관서에서 상담(고용허가제, 직장생활)부터 행정처리까지 연계통합[24. +18억]

②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중인 인력공단으로 일원화, 교육이력 관리 등 체계적 훈련[24. +9억]

③생활·문화·지역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직장상담(고용노동부) vs 주민복지(지자체) 역할분담

이에, '24년부터 민간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 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 정보 제공 등에 책임있는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의회」를 활용한 정책 공론, 우수사례 공유·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력 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생활지원 등 전반적인 체류지원에 있어 중앙-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역(업체 포함)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며 덧붙였다.

[붙임1]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붙임3] 고용허가제 운영 우수 지자체 사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주무관	최재운 (044-202-7735) 이정석 (044-202-7223) 조혜수 (044-202-7737)

1

추진 배경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에 따라 지역 현장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한 중앙 - 지방(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정례화(반기별)하기로 결정

* 22.10.7,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지자체 인력수요 조사 결과 반영 요구 등

-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 및 중앙 - 지방 협업을 통한 체류지원 방안 등 논의 필요

2

개요

- [일시] '23. 10. 17.(화), 14:00 ~ 16:00

- [장소] 로얄호텔 서울(2층 로얄볼룸, 서울 중구 명동길 61)

- 참석 대상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차관(주재) · 국제협력관 · 외국인력담당관 등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국토부(건축정책관), 농림부(농업정책관) 등
- (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외국인력 담당 국장 · 부서장 등

3

주요 내용

- ①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조사 분석·활용 방안
- ② 중앙 - 지방 협업을 통한 체류지원 강화 방안
- ③ 외국인력 운영 관련, 지자체 우수 사례 및 건의 사항 등 논의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광역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국장님,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후,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에 따라 지역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광역 지자체) 협의회를 정례화(반기별)하기로 결정

- 지난 7월에 1차 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폭 넓은 협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 오늘 2차 협의회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현장 외국인력(E-9) 수요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현장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력의 체류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확대·개편

□ 내년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간 고용허가제가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분들이 일 하는 동안에 근로권익이 보호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정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확대·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때 가장 필요로 하셨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렸으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도 11만명에서 추가로 1만명 확대하였습니다.
 - 인구가 줄어 구인난이 심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및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한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새롭게 허용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 및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적·질적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필요

- 이러한 고용허가제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에서 조금 더 가깝게 현장을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임있는 역할과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 우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자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오늘 지역에서 말씀해주시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최대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 이번에 지자체에서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 처음이었던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 간 수요조사 방식,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향후 지역별 수요조사가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조사기법도 보다 정교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초 산업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인력이 되었습니다.

- 더 나아가, 이제는 외국인을 단순히 산업현장 '인력'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에,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 직장 적응, 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는 전반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 오늘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훈련,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적정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체류관리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4년부터 중앙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정부(고용부·지방관서·인력공단)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추진

마무리 말씀

- 정부는 20여년 전에 비해, 급격하게 달라진 인구·산업구조 변화, 사회경제적인 요구 등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앞으로 중앙-지방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공론화, 지역 현장 의견을 더욱 더 세심하게 들어 지역과 산업 현장에 다가가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조직·인력 개편, 기능 정비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모범이 되는 역할을 확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외국인력 고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활용 및 주거 및 생활지원 등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업 방안 마련에 첫 발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역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기탄없이 말씀해주셔서,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붙임 3

고용허가제 운영 우수 지자체 사례

- ① **(광주)**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개발·총괄하는 ‘외국인주민과’ 신설(‘23.7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 사업개요: ‘23년~’26년,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3층(약 2,500m² 예정), 100억원(국비 50, 시비 50, 토지매입비 별도), 통·번역, 법률·문화 교육 등 외국인주민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
- ◆ 추진사항: ▲(‘23.3월) 센터 명칭 검토(가칭 ‘광주글로벌피스센터’), ▲(‘23.5월) 센터 건립 추진 TF팀 구성·운영, ▲(‘23.9월) 센터 건립 계획 방침 결정

- ② **(울산)** ‘울산 동구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 구성(민·관 합동)

- ◆ 추진사항: 「울산 동구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발표(‘23.6월)
 - (구성) 울산동구·고용부·법무부·경찰·산업인력공단, 시민단체, 기업체* 및 자문위원
 - *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 (내용) 외국인노동자 관련 각종 사회문제를 공론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지원사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 계획 등

- ③ **(인천)**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업무에 대한 외국인력 허용 결정(‘23.9월)에 따라 고용허가제 안내*를 포함한 중앙-지역-업계 합동 체류지원 대책** 강구

* ‘국토부-인천시-공항공사’ 등 합동 기업 설명회 개최(1차: ‘23.7월, 2차: 10월 예정)

** ▲(국토부·공항공사) 고용허가제 신청 제도 안내, 기업 인력 애로 의견수렴 및 지원
▲(인천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숙사 설립 방안 검토 등

※ 국토부는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기업 지원 TF’ 구성·운영(‘23.9월~’24.6월)

- ④ **(부산)** 제조업(기계부품산업) 외국인력 수요조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일자리실태조사’ 시 외국인력 채용 의사, 건의사항 등 파악

* ‘23.4~7월 진행, 업종별 외국인력 희망 여부 및 규모, 기업 애로·건의사항 등 조사